

아파트 불법 투기 116건 적발

전주시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 불법 투기 의심되는 1105명 대상 집중 조사 편법 증여 52건·분양권 전매위반 23건 등 경찰 고발·세무서 통보·과태료 부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아파트거래 조사 특별 조사를 꾸린 전주시가 아파트 가격 급등 시기 불법 투기를 대거 적발해 경찰에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전주시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단장 백미영)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아파트 거래 총 2만5,961건 가운데 불법 투기가 의심되는 1,105명을 대상으로 올 1월부터 집중 조사를 벌인 결과 총 116건의 불법 투기 사례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시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이 불법투기를 조사한 이 시기에 혁신도시, 만성지구 등 신도시를 중심으로 전주 전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8.85% 급등했다. 전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약 4% 안팎이다.

위반 유형은 편법 증여 52건을 포함해 소득세법 위반 19건 등 국제청과 관련된 법 위반사례가 총 71건으로 가장 많았다. 분양권 전매제한 위반 23건, 명의신탁 1건, 중개사법 위반 11건,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 9건, 법인의 목적외자금사용 1건 등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이 적발된 편법 증여의 경우 가족 간에 매매한 뒤 매도인이 전세 계약자로 들어가면서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치르지 않거나 가족이 아파트 잔금을 치러주면서 무이자 차용증을 쓰는 등의 사례가 다수 나왔다.

거래 당사자가 외지인인 경우도 적지 않았다. 총 116건 중 외지인의 수는 37명으로 전체의 31.9%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전북 8, 서울 7, 대전 7, 충남 6, 전남 3, 경기 2, 충북·제주·세종·광주 각 1명 순이었다.

시는 조사 결과 법령 위반사례 중 23



30일, 전주시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 백미영 단장이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제3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전주시청 제공)

명 경찰서에 고발 및 수사를 의뢰하고, 16명은 세무서에 통보했으며, 7명에 대해 즉시 과태료를 부과했다. 나머지 70건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그동안 시는 양 구청 민원봉사실과 시 건축 관련 부서에서 아파트 투기 여부를 조사해왔으나 이번에 부동산 전문가 2명 등이 포함된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심도 있게 조사해왔다. 특히 시의 아파트 불법 투기 조사는 광역수사대,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등과 공조체계를 통해 폭넓게 진행함으로써 한층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의 부동산 부패수사 관련회의에서는 이 같은 전주시의 부동산 투기 조사 방식이 성공사례

로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광역수사대와 합동 조사를 벌여 222건을 검찰송치 통보하고, 475명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또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 광역수사대와 합동 조사를 펼쳐 224건을 검찰송치 통보하고, 535명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백미영 단장은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 운영으로 시민들의 부동산 불법 거래행위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큰 성과"라며 "짧은 기간 단기·일시적 소규모 조사가 아니라 장기·지속적인 대규모 조사를 실시해 그간 관행처럼 만연한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김승수 전주시장, 지방자치복지대상 수상

'사회복지사의 날' 행사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혁신적 사회복지 정책 시행 공로

'엄마의 밥상'과 통합돌봄 선도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에 힘써 온 김승수 전주시장이 사회복지사들이 주는 최고의 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전주시는 김승수 시장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주관으로 열린 '2021년 제15회 사회복지사의 날' 행사에서 지방자치복지대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방자치복지대상은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앞장선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기여도 등을 지지하기 위해 주는 상으로, 올해 신설됐다.

김 시장은 지난 민선6기 때부터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대표적으로 전국 지자체 최초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자기계발과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 복지카드를 지급했다. 종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동아리 활동비용과 보수교육비를 지급하고 해외연수도 지원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혁신적인 사회복지 정책을 시행하는 데에도 힘을 쏟았다. 특히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 사업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했다.

이밖에 전주시복지재단을 설립·운영하는 한편, 아동·청소년, 청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을 대

상으로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 데에도 공을 들였다.

김승수 시장은 "복지란 단지 소외 계층을 돕는다는 의미를 뛰어넘어 인간의 존엄과 평등에 관한 문제인 만큼 사회복지사들의 행복과 자존감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안정된 여건 속에서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성공 추진 '맞손'

전주시, 비전 선포식 참석해 환경부·24개 지자체와 협약 체결

전주시와 환경부가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하고 2050 탄소중립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전주시는 30일 화성 모두누림센터 누림아트홀에서 환경부 주관으로 열린 '스마트 그린도시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환경부 및 24개 지자체와 함께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기후변화에 대한 회복력과 적응력을 강화하고 지역이 주도

하는 2050 탄소중립 이행의 출발점으로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의 성공 추진을 기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시와 환경부는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의 적극적인 정보 공유와 홍보를 통해 사업이 국토 전체로 확산되고, 지역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이행이 촉진될 수 있도록 협력기로 했다.

특히 시는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집중하고, 환경부는

행·재정적인 지원과 법적 기반 마련에 힘을 쏟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해 12월 환경부의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돼 오는 2022년까지 국비 100억원 등 총사업비 164억원을 투입해 팔복동 일원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산업단지와의 주거지 사이 도로에 녹화벽을 설치해 비산먼지 등 오염물질을 차단하는 사업을 비롯해 ▲스마트 녹색쉼터 및 디지털 숲길도 구축 ▲빛물활용 자동살수시스템 운영 ▲친환경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 ▲공공건물 그린 리모델링 ▲스마트 생활안전 개선사업 등을 진행하게 된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빠르게 다가올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미래 주역인 아이들이 숨 쉴 수 있는 미래를 열어주기 위해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스마트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이 전주형 그린뉴딜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정에 환경부장관을 비롯해 전주시, 화성시, 강진군, 상주시, 김해시, 강원도, 공주시, 제주시 등 8개 지자체가 참석했으며, 17개 지자체가 온라인으로 함께 했다. /김윤상 기자



'돼지카드' 구매해도 30만원

전주시가 다음 달 1일부터 지역화폐인 돼지카드(전주사랑상품권)의 월 구매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시는 돼지카드가 올 석 달 동안 총 판매액이 1,361억원이 넘고 누적 가입자가 14만6,000명을 돌파하는 등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가용 가능한 예산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돼지카드의 선불 충전식 카드형 상품권으로 결제 시에는 충전금의 10%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캐시백이 적립된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완산구, 지적문서 DB 구축 추진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신계숙)는 오는 7월까지 지적 영구 보존문서인 지적측량 결과도에 대한 DB(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적 공부의 영구적 보존·관리체계를 확립해 위·변조를 막고 시민들에게 신속·정확한 지적행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완산구는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생산된 지적측량 결과도 약 2510면을 스캐닝 작업을 통해 디지털 이미지

로 구축한 뒤 기존 전산화 시스템에 추가할 예정이다. 1910년부터 2002년까지 생산된 토지대장과 지적도, 토지이동 신청서류, 지적측량 결과도 등의 경우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된 상태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민원인의 대기시간과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에도 구는 매년 발생하는 영구 기록물에 대해 즉각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추진해 중요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김윤상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